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 연구

A Study on Work Sectors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박 옥 철[†] · 김 락 기*

Park, Ok-Cheol · Kim, Rag-Ki

Abstract The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in Korea is to protect our legal market from personal right, creation of job, legal opening via OECD and FTA as well as the prevention of negative private investigation such as service center and private investigator operated without any control.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civil research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reviews the legal process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as well as considers the previous studies to suggest the work sectors of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appropriate to Korea. As a result, it distinguished the private investigation work into corporate, finance, insurance, medical service, Cyber, traffic accid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ost and forensic science.

Keywords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 Work Sectors

요 지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는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홍신소 등과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일자리 창출, OECD와 FTA 법률 개방으로부터 우리의 법률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 금융, 보험, 의료, 사이버(cyber),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실종자, 법과학으로 민간조사업무를 구분하였다.

핵 심 어 민간조사제도, 민간조사원, 민간조사, 사설탐정, 업무영역

1. 서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개인 및 기업 그리고 국가의 정보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자신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패배하고 만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 개인들은 물론 기업 및 단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업무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조사업무는 국가기관의 치안 능력 보안과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 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탐정’이나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파악 및 사생활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신소’나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공공연하게 유사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일본의 영향으로 ‘홍신소’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뒷조사, 채권 회수 등을 비합법적으로 행하였는데, 이 업종이 ‘홍신업 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위반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자, 1970년대부터 민원서류 대행,

† 교신저자 : 정회원, 경동대학교, 경호학과, 전임강사
E-mail : poc@k1.ac.kr
TEL : (033)639-0293 FAX : (033)639-0299

* 용인대학교 박사과정

택배 서비스 등 단순 대행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심부름센터’가 출현하게 되었다(황정익 등, 2005).

그러나 문제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홍신소 등에서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 사이트로 옮겨가 타인의 뒷조사나 채권추심, 청부폭력,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어 그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의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모든 요구를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완벽하게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행할 수 없고, 재판관의 판단도 항상 완벽하지 못하여 해마다 일정한 비율의 미제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해결사 등을 고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행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야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며 국민들은 분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제사건 등 피해자들의 의뢰에 의한 조사업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가 필요하다(손상철, 2005).

민간조사제도는 그 존재의 유용성이 검증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가운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발달하였으며 오늘날 국가기관의 치안능력보완과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기능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김종식,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과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5대 국회 때부터 정·관·학계가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의원입법안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여 하순봉(1999)이 입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상배(2005), 최재철(2006), 이인기(2008), 성윤환(2009), 이한성(2009), 강성천(2009) 의원 등 6명이 6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그 중 4건은 소관청문제 및 타법과의 충돌논쟁 등을 지속하다 임기만으로 폐기되거나 철회하여 무산되고, 현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경비업에 민간조사업을 추가)’과 같은 당 강성천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법안’이 소관청을 법무부와 경찰청 중 어느 곳으로 하는 지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Table 1.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입법추진 경과(김종식, 2011)

대표발의	제안일	법안명	주요 내용	결과
하순봉 의원 (한나라당)	1999년 법안 초안을 완성하여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2004년 5월 임기만료까지 발의하지 못하여 백지화됨.	공인탐정에 관한법률안	‘공인탐정’으로 호칭 정의(임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범죄조사 개인에 관한사항의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화재사고손실 등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 조사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제공 감독청을 경찰청으로 함	정치권 최초로 탐정제도 도입하여 공론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발의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음
이상배 의원 (한나라당)	2005. 09. 08.	민간조사업법안	‘민간조사원’으로 호칭업무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17대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p>화재사고, 손실, 명예 훼손의원인과 책임의 조사 소재가 불명확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개인에 관한 정보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감독청을 경찰청으로 함</p>	
<p>최재철 의원 (열린우리당)</p>	<p>2006. 03.14 발의 (2006. 03. 31.) 철회 2006. 04. 05. 재발의</p>	<p>민간조사업법안</p>	<p>‘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사람의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분실, 도난,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 탐지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감독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함</p>	<p>17대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p>
<p>이인기 의원 (한나라당)</p>	<p>2008. 09. 24.</p>	<p>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경비업에 민간조사업 추가)</p>	<p>‘민간조사관’으로 호칭 업무 의뢰에 의해 미야 가출인 실종자에대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확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 감독청을 경찰청으로 함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p>	<p>2008. 10. 06.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09. 02. 23. 행안위법안 심사소위에 회부</p>
<p>성운환 의원 (한나라당)</p>	<p>2009. 02. 05.</p>	<p>민간조사업법안</p>	<p>‘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 소재불명인 사람 또는 도난 분실된 재산의 소재확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감독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함</p>	<p>2009. 02. 17. 철회</p>
<p>이한성 의원 (한나라당)</p>	<p>2009. 03. 30.</p>	<p>민간조사업법안</p>	<p>‘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 미야,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감독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함</p>	<p>2009. 04. 06 철회</p>
<p>강성천 의원 (한나라당)</p>	<p>2009. 04. 10.</p>	<p>민간조사업법안</p>	<p>‘민간조사관’으로 호칭 업무 미야,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p>	<p>2010. 02. 24.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2011년 현재)</p>

			번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감독청을 으로 함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	--	--

민간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한국경호경비학회, 대한민간조사학회, 민간경비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업무 범위, 자격제도, 관리·감독 등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하순봉(1999)이 입법안을 발의한 이후 연구된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학위논문이다.

Table 2. 민간조사(탐정)제도 학위논문

구분	자료명	저자사항
박사	·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 민간조사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정일석(2008) 최현락(2008) 강영숙(2007)
석사	· WTO/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사업의 법적문제 : case of Korea ·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제도 도입에 대응한 경찰정보 기능의 발전방안 · 한국형 민간조사관(탐정)의 활용성 확보 방안 · 민간조사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사업의 전망과 도입방안 ·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한국에서의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탐정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 ·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인 탐정제도 도입과 사경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고지훈(2011) 이아인(2011) 문경환(2010) 이선갑(2009) 안동현(2008) 정연민(2008) 권영희(2008) 공도환(2008) 송연성(2007) 송봉규(2007) 김억태(2007) 신현주(2007) 김원태(2002)

3. 각국의 민간조사업무 비교

3.1 미국

미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로서 자치제 경찰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조사제도 역시 각 주마다 자격요건, 업무의 범위, 면허취득 유무, 시험제도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민간조사원(탐정)을 비용, 보수 기타의 보상을 받고 법에 규정된 업무내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업을 참여하거나 인력공급을 받아들이거나 하청계약을 하거나 조사 등 혹은 조사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The Pennsylvania Private Detective Act of 1953, §12).

- 미국 연방이나 주 혹은 미국에 속한 영토에 대해 발생되거나 위협이 되는 범죄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 특정개인이나 단체, 협회, 조직, 사회분야, 동료, 범인 등의 확인, 습관, 관계, 거래, 평판, 특성 등에 대한 조사
- 증인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조사
- 실종자의 소재파악
- 분실 및 도난재산의 회복 및 소재파악
- 특정인, 특정조직, 사회, 협회, 법인, 직원 등과 관련된 사실 확인

-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한 책임의 원인과 근거 등의 파악
- 파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사람이나 그 당시 고용주에 대한 사실에 관한 조사
- 종업원, 관리인, 계약자, 하도급들의 행위, 정직, 효율, 충성 또는 활동에 대한 사실 조사
- 형사재판, 민사재판 시 조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 전에 사용될 증거자료의 사전확보

3.2 영국

영국은 국민이 탐정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업무나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직경찰, 전직 수사 및 정보기관 출신들이 탐정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이상원 등, 2007). 따라서 수사전문 기법이나 전문지식을 교육시키는 탐정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연수를 받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국가직업인증(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만 취득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민간조사(탐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에 제정된 민간경비산업법(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은 어떠한 개인이 특정한 개인 및 개인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감시질문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민간조사(탐정)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으로 별도의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타당성 여부 및 방법론에 있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11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 기존의 국가직업인증제(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통해 레벨 1-5 중 3 이상을 취득해야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게 요건을 상향조정하였다.

영국 탐정의 주된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변호사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건사고와 관련된 사실 관계조사 및 보험사기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정보수집, 변호사의 경우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의 수집 및 증인과 목격자 확보를 주로 의뢰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원(탐정)은 사람, 사람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시, 질문, 조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Section1)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경비 사업법 Schedule 2, Part 1,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Table 3. 국가직업인증제(NVQ)의 단계별 능력 기준

능력 기준	
Level 1	매일 되풀이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Level 2	개인이 홀로 혹은 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Level 3	복잡한 여러 가지의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Level 4	기술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며 수단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Level 5	다양한 업무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자신의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체크할 수 있는 능력

- 특정인물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수집
- 멸실된 재산상황 또는 그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감시, 조회 또는 조사로 규정함

3.3 호주

호주는 매우 체계적인 민간조사원(탐정)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민간조사(탐정)의 활동범위는 면허를 취득한 주에 제한되지만 자신이 활동을 원하는 주에 세금을 내고 업무활동에 대한 허가를 얻으면 다른 주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다. 호주의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송봉규, 2007).

Table 4. 호주 민간조사원(탐정)의 업무범위(손상철, 2005)

주명	업무 범위
Western Australia	· 채권의 회수, 영장송달, 상품회수 ·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3자를 찾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사업이나 개인적 문제의 조사
Northern Territory	· 대금 입금이 안된 상품이나 동상의 회수 또는 그 소재의 확인 · 채권의 회수 또는 독촉 · 판결의 집행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업무 · 소송을 목적으로 한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실종자를 찾는 업무 ·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 또는 사업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Queensland	· 보수를 대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
Victoria	·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 또는 사업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실종자의 소재확인
South Australia	· 상품의 회수 또는 소재확인 · 채권의 회수 또는 독촉

3.4 일본

일본에서 민간조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민간조사관시험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민간조사관련 법안이나 제도가 없기에 민간조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경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단, 오사카는 제외). 즉, 영업이 까다로운 제한이 없기에 누구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5. 일본 민간조사원(탐정)의 주요 조사업무(강영숙, 2007)

업무영역	업무 내용	
행동조사	· 미행, 잠복 등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행동이나 행성지 파악	
	불륜조사	· 배우자, 애인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문제의 조사와 증거확보 · 특정인물의 행동이나 행선지, 교우관계 파악
	소행조사	· 외근 영업사원들의 외부활동을 추적, 확인하여 객관적인 평가 · 기업의 위기관리에 관한 종업원의 비밀누설이나 금품 등의 수수 · 근무시간 외의 취업유무 확인 · 횡령 등의 조기발견과 증거취득 · 산업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하는 차량이나 인물, 회사의 적발
사람 찾기 및 소재확인	· 가출인, 실종자, 첫사랑, 옛 친구, 은인, 원거리 특정인 등의 소재파악 · 특정인의 근무처 확인 등	
신용조사	개인신용조사	· 특정인의 자산이나 부채 등의 조사
	기업신용조사	· 거래처의 신용도, 현재 재무상태, 부채회수 리스크 등의 조사
기타배경조사	인연, 적성조사	· 교제상대, 애인, 결혼상대자에 대해 우려사항 및 신상조사 · 채용 예정자나 인사이동 등의 작업에 관한 조사
	사생활보호조사	· 도청, 몰래 카메라 등의 발견 및 조사 · 수상한 인물, 스토커 등에 대한 문제 해결 · 방법 컨설팅 등 ·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보안문제 해결
증거조사	· 소송에 사용될 재판자료 수집 등	

4. 한국 민간조사업무 영역

4.1 기업

오늘날 정보화세계화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경쟁력의 원천은 국가의 핵심기술이다. 한국의 경우 산업스파이는 IT 산업, 반도체, 정보통신 등 소위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04년에서 2010년 동안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하였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건 총 244건을 적발하였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6. 연도별 산업스파이 사건 발생 건수(산업기밀보호센터)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건수	26	29	31	32	42	43	41	244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은 기업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및 기업의 산업정보를 불법 및 합법을 가장하여 입수하거나, 교란행위를 통하여 경쟁기업의 기술과 상품 및 앞으로의 전략 등의 기업비밀을 끊임없이 첩보하는 산업스파이의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사내범죄(정보유출, 사내 절도 등)에 관한 조사
- 신용조사(개인의 지부능력조사)
-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하여 중요보직 후보자나 채용후보자에 대한 신변조사
- 채무자의 소재파악

4.2 금융

금융조사는 민가사건의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또는 강제집행(強制執行) 및 신용정보의 조사를 위해 이해관계의 개인 또는 기업이 의뢰한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신용정보조사와 재산조사이다.

Table 7. 금융조사업무(손상철, 2005)

업무	세부내용
신용정보조사	· 신용도· 연혁· 자산상태· 영업실적·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 ·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침해에 따른 신용조사
재산조사	· 부동산, 유체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건설기계, 유가증권 등

4.3 보험

보험범죄(insurance criminal)란 보험금을 불법영득할 목적으로 보험적용대상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844억원(적발인원 3만52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금액기준 15.5%(248억원), 인원기준 31.5%(7313명)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사고가 642억원(34.8%)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과장이 327억원(17.7%),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17.6%)으로 뒤를 이었다.

- 보험사와의 업무협조

- 보험가입자 및 보험목적물 인수업무
- 보험범죄사건 분석 및 조사
- 보험범죄혐의자 소재확인
- 각종 보험사고 사실여부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4.4 의료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사고(醫療事故)라하며 의료과오(醫療過誤)는 의료사고 중에서 과실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환자 측이 의료인의 과오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으로 대개 배상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최근 의료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배경에는 의료분쟁(醫療紛爭)의 증가가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손상철, 2005).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 2009년 3년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711건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603건으로, 2007년 (940건)과 비교 시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과실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사실여부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 의료 전문 박사들의 심형분석 판정

4.5 사이버(Cyber) 범죄

사이버(Cyber)범죄는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및 판매 등을 일컫는 불법행위이다.

Table 8. 사이버(Cyber)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 건수	77,099	88,731	82,186	88,847	136,819	164,536	122,902
검거	건수	63,384	72,421	70,545	78,890	122,227	103,809
	인원	70,143	81,338	89,248	88,549	128,635	160,656

- 사이버상의 범죄증거수집
- 사이버범죄 용의자 신원확인 및 주소지 추적
- 사이버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및 방재 컨설팅

4.6 교통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008년 기준으로 216,7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5,810명에 이른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2.9명으로 OECD 평균 1.5명 보다 두 배나 많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비용은 8조 6,000억 원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조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목격자 확보, 사실인정에 필요한 특정지점의 확정, 가해차량의 상태, 피해상황 조사, 현장 및 증거가 될 물건의 사진 촬영, 증거물의 압수와 감정, 피해자에 대한 조사,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 등을 한다(정희영, 2009).

-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조사감정
- 사고목격자 추적

- 교통공학 분석 후 시뮬레이션기법으로 사고 상황 재현 분석
- 가해자와 피해자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 뺑소니 차량 및 차주 추적

4.7 지적재산권침해

대한민간조사협회(KPIA)에서는 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에 대한 무체재산권이다. 즉,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design 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 right),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등이며 또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작품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관한 권리보호와 과학, 문학, 공업, 문학 또는 예술분야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특허침해 조사
- 실용신안 침해조사
- 디자인 불법 복제품 색출
- 불법 위조상품 생산에서 출하까지의 유통경로 파악
- 불법 위조상품 불법밀수품 역추적

4.8 실종자

실종자관련 조사업무는 실종자 및 미아의 부모나 가족 등의 의뢰에 의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조사업무를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0년 8월 말 현재까지 아동·지적장애인·치매노인 등 취약계층 실종자가 하루 54.6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실종자가 504명에 이른다. 취약계층 실종자는 2006년 1만7천470명, 2007년 1만9천959명, 2008년 1만8천850명, 2009년 2만4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년 8월말 현재에만 1만6천162명이 발생했다.

- 탐문조사 및 정황증거수집
- 실종자 및 미아 소재파악

4.9 법과학

법과학과 관련된 조사업무는 각종 사건 및 사고에 있어 과학적 분석과 해석이 법적인 증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임받은 사건의 조사업무를 의미한다. 특히 법정분쟁에서 법과학은 확실한 증거를 입증함으로써 공정한 판단의 잣대로 이용된다.

- 법화학 : 화재 원인분석, 부정유류 감정 및 검사, 폭약 및 폭발물 분석, 독극물 검사 및 분석, 환경오염 감정 및 검사
- 법생물학 : 유전자검사 및 감정, 정액 검사 및 감정, 의사체 원인규명, 사체의 사인규명
- 법물리학 : 인영 감정 및 분석, 교통사고의 역학적 분석, 총기사고의 역학적 분석, 음성 감정 및 분석
- 법의학 : 사인규명(부검), 질내 검사(정액채취검사), 두개골(골격검사), 복부절개 검사, 부분 변사체의 신원확인, 백골화 변사체의 원형복구, 친자확인 검사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과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관련 조사는 사내범죄(정보유출, 사내 절도 등)에 관한 조사, 신용조사(개인의 지부능력조사)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하여 중요보직 후보자나 채용후보자에 대한 신변조사, 채무자의 소재파악 등이 있다. 금융관련 조사는 신용정보조사, 재산조사가 있다.

신용조사는 신용도·연혁·자산상태·영업실적·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조사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침해에 따른 신용조사가 있다. 재산조사에는 부동산, 유체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건설기계, 유가증권 등이 있다. 보험관련 조사는 보험사와의 업무협조, 보험가입자 및 보험목적물 인수업무, 보험범죄사건 분석 및 조사, 보험범죄혐의자 소재확인, 각종 보험사고 사실여부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이 있다. 의료관련 조사는 의료과실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사실여부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의료 전문 박사들의 심형분석 판정 등이 있다. 사이버(cyber)관련 조사는 사이버상의 범죄증거수집, 사이버범죄 용의자 신원확인 및 주소지 추적, 사이버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및 방재 컨설팅 등이 있다. 교통사고관련 조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조사감정, 사고목격자 추적, 교통공학 분석 후 시뮬레이션기법으로 사고 상황 재현 분석, 가해자와 피해자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뺑소니 차량 및 차주 추적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관련 조사는 특허침해 조사, 실용신안 침해조사, 디자인 불법 복제품 색출, 불법 위조상품 생산에서 출하까지의 유통경로 파악, 불법 위조상품 불법밀수품 여추적 등이 있다. 실종자관련 조사업무는 탐문조사 및 정황증거수집, 실종자 및 미아 소재파악 등이 있다. 법과학에는 법화학, 법생물학, 법물리학, 법의학업무가 있다. 법화학은 화재 원인분석, 부정유류 감정 및 검사, 폭약 및 폭발물 분석, 독극물 검사 및 분석, 환경오염 감정 및 검사, 법생물학은 유전자검사 및 감정, 정액 검사 및 감정, 의사체 원인규명, 사체의 사인규명, 법물리학은 인영 감정 및 분석, 교통사고의 역학적 분석, 총기사고의 역학적 분석, 음성 감정 및 분석, 법의학은 사인규명(부검), 질내 검사(정액채취검사), 두개골(골격검사), 복부절개 검사, 부분 변사체의 신원확인, 백골화 변사체의 원형복구, 친자 확인 검사 등의 업무를 한다.

참고문헌

- [1]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 [2] The Pennsylvania Private Detective Act of 1953.
- [3] 강영숙 (2007).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 [4] 고지훈 (2011). WTO/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case of Korea.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국제대학원.
- [5] 공도환 (2008). 한국에서의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탐정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법무대학원.
- [6] 권영희 (2008).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 [7] 김억태 (2007).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 [8] 김원태 (2002). 공인 탐정제도 도입과 사경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 사회체육대학원.
- [9] 김종식 (2011).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10] 문경환 (2010). 민간조사제 도입에 대응한 경찰정보 기능의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 [11] 손상철 (2005). 민간조사학개론. 백산출판사.
- [12] 송봉규 (2007).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 [13] 안동현 (2008).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 [14] 신현주 (2007). 탐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 [15] 이상원, 김상균 (2006).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8회 춘계세미나, pp.58-59.
- [16] 이선갑 (2009). 한국형 민간조사관(탐정)의 활용성 확보 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 [17] 이아인 (2011).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 [18] 정연민 (2008). 민간경비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업의 전망과 도입방안. 석사학위논문, 용인대 대학원.
- [19] 정연성(2007).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 사회체육대학원.
- [20] 정일석 (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21] 정희영 (2009). 교통사고조사 과학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ITS대학원.
- [22] 황정익, 김윤철, 백창현 (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3] 최현락 (2008).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 논문접수일 : 2011년 08월 31일
- ▶ 심사의뢰일 : 2011년 09월 01일
- ▶ 심사완료일 : 2011년 09월 14일